

auri 10년, 건축·도시는 문화가 되다

김대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건축정책과 auri의 지난 10년

2017년은 대한민국 건축계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 삶의 질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건축정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3년마다 열리는 건축분야의 국제올림픽인 UIA 세계건축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로 창립한 지 꼭 10년이 되는 auri가 앞선 건축계의 기념비적 행렬의 앞과 뒤에서 발을 맞추고 있다. 특히 건축정책과 auri의 지난 10년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가격(價格)이 아닌 가치(價值)로, 양(量)이 아닌 질(質)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고, 경제발전에 차치되었던 우리 건축·도시의 문화(文化)를 다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

「건축기본법」을 시작으로, 민간과 시장에만 맡겨왔던 건축을 공공성의 영역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룰 정책과 이를 작동하게 할 시스템들이 구축되었다. 그 정책의 그림은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수립·시행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2.)」, 노후한 기성 시가지에 대한 개발 보다는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 건축자산의 보

준과 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6.)」, 건축문화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3.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 등 신규 법률이 제정되고,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건축법」과 「경관법」(2013.8.)이 개정되는 등 정책 목표에 따른 체계적 제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정책을 실행하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선도의 다양한 시범사업들도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auri는 관련 연구를 통해 법률 제정과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국가한옥센터·도시재생지원기구 등의 조직을 통해서 각종 사업과 포럼·서적 발간·교육 등을 실시하고 건축정책을 지원하며 숨 가쁘게 달려 왔다.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산업체, 국민들 사이에서 때로는 싱크탱크이자 코디네이터로, 또는 서포터즈임을 자임해 왔다고 하겠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식(2007)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은 골목길에 마주한 낡은 단독주택은 재개발 대상이고 곧게 뻗은 신작로 주변에 새로 생긴 높은 아파트가 그 도시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단지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작고 재산가치가 적더라도 각자의 다양한 삶을 담을 수 있는 협소주택, 전원주택, ‘한옥’ 등의 내 집 짓기가 부러움의 대상되고 있다. 또 한 구시가지, 공장지대, 달동네였던 서울의 북촌, 경리단길, 성수동, 부산의 감천마을처럼 손때 묻은 도시의 시간과 흔적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가치로 이끌어내는 ‘삶의 공간’들이 각광받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건축자산’은 사찰과 궁전 등 종교와 정치 지도계급의 유산들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이제 인천과 군산의 근대건축 유산이나 전주 한옥마을의 생활형 한옥군이 우리의 삶터이자 건축문화유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은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생소한 단어였지만, 체육·문화 시설의 서비스가 공간복지의 척도가 되고 녹음(錄陰)이 푸르른 집 근처 공원이 주거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져 ‘녹색건축물’ 조성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과 관련해서도 철거보다는 필요와 기호 맞게 고쳐서 사는 일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요컨대 내가 사는 집과 일터, 동네, 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직접 공간만들기에 동참하면서, 전문가들이 쓰던 ‘주거’, ‘한옥’, ‘공공건축’, ‘녹색건축’, ‘도시재생’ 등의 용어들이 일상어가 될 만큼 시민의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이제 건축과 도시공간이 주변인의 삶과 사회를 관통하는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고 선도해 온 건축정책의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실현한 것은 도시건축 공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논의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auri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과 그 노력들에 부응해 온 시민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어떤 것이 좋은 건축, 아름다운 도시인가에 대한 합의 없이 공급과 생산에만 치중했던 건설과 개발의 시대를 지나고,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의 가치를 함께 탐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지난 10년의 건축정책과 공간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만드는 다음의 10년과 미래의 건축 및 도시공간은 더욱 진일보할 것이라는 확신도 키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빙집 등 도시쇠퇴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기술 발달에 의한 미래 공간구조의 재편 등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건축·도시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으로서 공간을 대하는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졌다.

이에 국민이 매일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시스템의 철학을 주도하는 건축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auri의 소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의 소임은 일상공간을 개선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체계를 개선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건축정책과 건축도시디자인 체계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지원하는 일이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도, 쇠퇴된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만의 주민과 건축, 도시공간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풀어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 까지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수립하는 건축도시공간 정책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실현 가능한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10년도 auri가 건축도시공간연구의 선도자로서 참여주체들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하는 보고(寶庫)이자 촉매(觸媒)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